

# “서울메가시티 구상, 망국적 발상”

### 도의회, 김정기 도의원 발의 ‘규탄 결의안’ 채택… “지방소멸위기 직면 환자 놔두고 상류층 병실 늘리는 꼴”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발의한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20일 열린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메가시티 구상의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실행 계획 마련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메가시티 논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켰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김정기 의원은 이틀 두고 “구급차에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접 지역 단체장의 회동, 김포시 이외 수도권 지역의 추가적인 편입 논의에 이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속도전으로 치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려 가야 할 지방이라는 응급환자는 외면하고 서울이라는 상류층 전용 병실만 늘리겠다고 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지방을 죽이는 서울메가시티 구상은 뒤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연사는 뭐냐”며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자기모순적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는 기형적인 현상을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살리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시군 축제 5년 만에 폭주... 질적 개선율”

문승우 도의원



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축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지역축제의 양적 구조조정 유도 방안 마련과 선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20일 열린 도의회 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축제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지역축제의 양적 구조조정과 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축제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도에 총 47건이었고, 축제 예산은 266억 1,600만 원 규모였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89건으로 89.4%가 폭증했고, 예산규모도 433억 8,300만 원으로 63.0%가 급증했다.

10여 년 전 지역축제 난립이 야기하는 각종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축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문승우 의원은 “지역축제 평가 제도의 취지 중 하나도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축제 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축제 위주로 재편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양적 급증에만 매몰되고 말았으며 고집이었다. 제대로 된 축제기획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축제까지 버젓이 등장하는 상

진적 지역축제 모델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시군 지역축제가 시장·군수 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방관할 게 아니라 도의 정책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문했다.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문 의원은 “지역축제는 자치단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하기 쉽고, 관료적 발상과 경직된 운영으로 폐해를 노출시켜오는 지 오래”라고 하면서 지역축제 난립의 시대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강태창 도의원 “지방소멸 출구전략 모색해야”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태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20일 제405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 인구는 2021년 3월에 180만이 붕괴되었고, 2023년 8월에 176만이 붕괴되었다”며, “전라북도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로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영유아 및 학령인구 유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인 가운데, 자연감소 및 인유출이 심화하여 전라북도 인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지방소멸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인구이동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 명확한 정책 목표와 수혜자 중심의 핀셋 정책 수립·운영, 여차별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 사전검토, 전문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시대에 지방소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비빔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병도 도의원



이병도 의원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지정제도는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몇 년 전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공동체를 보유자로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20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빔밥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2013년 우리나라 식문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김치 중추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중국이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를 주장하며 이른바 ‘김치 공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김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장문화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진흥원 등과 함께 국제 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등 장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화재위원회는 2019년에 장문화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 대상으로 정한 바가 있다.

인정하는 공동체 종목이 신설됐다”면서, “비빔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이며 고유한 식문화를 대표하는 K푸드의 선두주자이자 공동체 종목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비빔밥의 기원은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궁중에서도 즐겼던 한국의 고유음식으로서, 다채로운 식재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 융합과 교류의 매개이자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식문화”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유네스코 협약이 규정하는 대표목록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 및 행·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두르자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1조원 투자, 전북 '금융·IT 산업' 날개 달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 컨벤션·호텔, 디지털혁신센터 개발  
(전주탄소산단) 전북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2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경진 (쥬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정재용 아트리서치(주) 대표, 김창호 파인애플퍼너스(사)신승운(주) 대표 등 15개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하라”

### 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발의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친 것은 2021년(912만원) 이후 처음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부는 2023년산 산지 쌀값을 수확기 평균 21만원(80kg)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쌀값 21만원 선은 무너졌고 산지 쌀값은 20만1,384원(80kg)(11월 5일 기준)으로 향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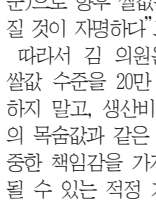
이후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즉,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자율주행시대 선도적 위치 선점해야”

박용근 도의원



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이다.

현재 군산·익산 등 2개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전북도가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정수)은 제405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 컨트롤타워 부재 등 시급히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

분담율과 낮은 대중교통 분담율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등을 펼치기에 적격지”라며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임에도 전라북도 행정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북형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센터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R&D 및 SOC 분야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약 1천억원 편성하는 등 완전자율주행을 미래모빌리티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은 높은 승용차

분담율과 낮은 대중교통 분담율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등을 펼치기에 적격지”라며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임에도 전라북도 행정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R&D 및 SOC 분야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약 1천억원 편성하는 등 완전자율주행을 미래모빌리티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박준배 전 김제시장, 25일 김제·부안서 출판기념회

박준배 전 김제 시장이 본인이 추진한 차별화된 특수정책을 모아서 ‘박준배 정의와 경제실천’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덕암정보강당, 오후 3시 부안관광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박 전시장은 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사 정의 7.0을 실천한 사례, KTX 오지 김제를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KTX 김제역 정차를 이끌어낸 사례, 청년들이 불려들도록 비전있는 김제를 위해 새만금 첨단 복합단지 75만평과 스마트팜 단지 25만평을 새만금 땅의 주인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500여억원을 비축한 사례 등 30개 이상의 정책사례에 얽힌 어려움 일들을 회고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 전 시장이 모시던 전 도지사를 비롯한 몇 개 대학 전직 부총장 및 여러 교수들과 전직 차관급공무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시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거리 플래카드도 없이 검소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박 전 시장은 밝혔다.

/김제·라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축! 전주매일 창간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유자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 말기 암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니빙동 운영
- 열린, 관상동맥협심증·심근경색재활을 시행

각종 위기 수수기관

-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9회 연속 “1”등급
-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1”등급
- 치매 적정성 평가 “1”등급
-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A”등급

진료과목(147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소화기내과	가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신장내과	응급의학과	노년학과	치과
내분비내과	외과	비뇨기과	대체요법과
요추기내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한방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화번호 063-472-5000